

계육산업의 계열화체계는 공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조직

계열체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노라면 집단적인 산업과 경영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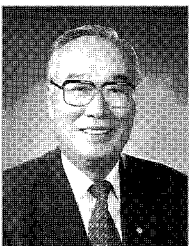
계육산업은 그 경영조직의 속성상 농장안(on-farm)과 농장밖(off-farm) 기능의 계열/통합(integrated production and marketing)이 필수적인데 아직도 운영/계약상의 부분적인 갈등사항을 놓고 마치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각 부문의 산업종사자가 계열체계의 진면목을 다시 알아 볼 것을 권하고 싶다.

40년의 계열화 역정

필자가 계열 경영조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50년전의 일이고 한국의 계육산업이 이 통합경영 체계를 시도한 지도 40년이 지났다. 농업의 상업화와 축산의 기업화가 진전되면서 생산과 유통, 가공과 소비자 지향의 산업경영(industry management)이 일반화 되었고, 닭고기 산업은 이 부문의 선두주자로 각광을 받아왔다.

미국은 1950년대, 일본은 1960년대, 한국은 1970년대 이래 육계(broiler) → 계육(chicken), 농장 → 시장·생산자 → 소비자·국내 → 세계의 패턴으로 산업과 경영조직이 바뀌어 온 것이다.

70/80년대에 계육기업인, 학계/연구 부문이 당시 양계협회 중심으로 통합경영의 협력체계를 만들었고, 정부도 1985년부터 계열화 정책을 추진했다. 드디어 1990년을 전후하여 육계산업 안정발전이 기틀을 잡아 계열체계가 주도하는 계육산업으로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는 80% 이상의 계육이 이 방식의 직, 간접 영향권 하에서 취급되고 있어 다행이다.



박영인 이사장
한국자조금연구원



“계열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해법이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찾아지길 기대한다.”

계열화는 상호 의존하는 경영체제

1970년대의 육계인(肉鷄人)은 독자경영(independent operation)의 불안정한 ‘육계 투기업’ 악몽을 지금도 기억할 것이다. 또 그 이후의 계열체제화 과정에 관여한 계육인(鷄肉人)은 오늘날 안정적인 산업조직과 사육자 보수 체계의 확립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 비록 계열체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선진국이 왜 모두 선호하여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인지 다시금 유의해야 한다.

계육산업의 계열화는 육계생산자(사육주체)와 계육경영자(계열주체) 간의 계약체제가 필연적이다. 소비자를 지향하는 계육생산 및 판매를 위한 농장안과 농장밖 기능 수행자 간의 분업관계라 할 수 있다. 무슨 주종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전제로 하는 상생, 공조 체제이다. 계약 내용은 서로 협의 조정하고 기업형 계열주체의 손익관리에 불만이 있으면 사육주체끼리 협동형 계열화를 추진하면 된다.

현행 자조금법은 계열체제와 안 맞아

육계/계육자조금의 난맥상(亂脈相)은 자못

안타깝다. 현행법에 따라 추진하다가 계열화 산업체제와 궁합이 맞지 않아 몇 해를 허송하고 있다. 계열체제와 어울리는 법 개정도 쉽지 않고, 특히 계육관련 3단체가 공동조성, 운용을 합의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는 자조금을 논의하는 과정에 계열화 체제가 문제의 핵심인 듯 부정적으로 인식, 불평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하니 크게 우려된다. 이는 사실과는 다르다.

그래서 필자는 수년전부터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광범위한 공개토론 과정을 거쳐 자조금과 계열화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오고 있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산업/협회가 나서야 한다.

30~40년 전에는 산업과 학계에 강한 리더십의 인사들이 있어 자조금보다도 더 어려운 계열체제의 도입, 정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세대가 바뀐 이제 정부, 산업차원에 앞서 개인 입지를 우선시하는 가치 변화의 풍토를 어찌하랴. 어쨌든 계열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장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해법이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찾아지길 기대한다. 